

# 금호그룹, 워크아웃 추진 “균열”

## 금호타이어 임금협상 불발로 변수 ... 회사 존망 걸려 수용 불가피

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이 요구한 노조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대주주 일가의 사재출연으로 한 고비를 넘기는 듯했던 금호그룹의 워크아웃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권단이 요구하는 노조 동의서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호타이어가 제시한 1377명에 대한 해고 또는 도급화 등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행한다면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월8일에 열렸던 임금단체협상 3차 교섭에서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노조의 대응이 또 하나의 난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추진으로 2월1일부터 조기 협상을 시작한 금호타이어의 노사 임금협상은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금호타이어는 2월8일 교섭에서 1377명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도급사로의 전직 신청과 명예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노조에 제시하는 한편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노사동의서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정리해고를 통해 약 440억원의 노무비 감소 효과와 생산성 향상으로 180억여원의 효과, 임금 및 수당 삭감을 포함해 전체 1421억원을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함께 살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강경 대응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일 뿐 회사의 존망이 걸린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노조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는 회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기 3개월 전인 2009년 9월에도 임금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가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0>